

2025년도

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



국 방 부

|| 목 차 ||

I. 개 요	1
II. '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	2
III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	
①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	4
②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	18
③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	25
④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	32

I. 개 요

□ 문서의 의의 및 목적

「'23~'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'25년도 시행계획'으로, 군인의 기본권, 군기강, 복무여건 향상 등을 통해 '선진병영문화 창출' 및 '자랑스런 과학기술 강군 육성'에 기여

□ 정책 추진 및 관리

○ 제대별 책임

구 분	내 용
국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정책의 연도별 '시행계획' 작성 및 하달 • 법령개정, 예산확보, 정부협업, 전문연구 필요과제 추진 • 연도별 정책추진 성과분석 및 차기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• 군인복무 기본정책 수정소요 검토 및 대안 수립 * 성과분석 결과, 국방정책의 변화, 각 군의 건의 등을 반영
각 군 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도별 '기본정책 시행계획'에 관한 '세부시행계획' 수립 • 과제시행을 위한 규정, 방침, 지침 수립 후 예하부대 하달 • 연도별 정책추진 성과분석 및 차기연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* 세부시행계획 추진성과 분석은 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 후,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
작전사령부 이하 야전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, 각 군 본부에서 지정한 '행동화 과제' 실천 • 사·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과제추진 성과분석 후 보고

○ 법령 제·개정 및 예산확보

- 기본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령 제·개정 소요를 식별한 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반영
 - * 장병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, 타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, 대내·외로 민감한 사항 등은 전문가 조언 및 철저한 법률적 검토 후 추진
-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
 - *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정책과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적극 홍보

Ⅱ. '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

〈 대과제 〉	〈 중점 추진과제 〉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</p>	<p>①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제도 개선 2)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 품질 향상 3) 국민 생활 수준에 맞춘 군 주거환경 개선
	<p>②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직업군인 수당 개선 2) 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개선
	<p>③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2) 장병 휴식권 보장 및 휴가사용 장려 문화 조성 3) 간부 근속휴가 신설 및 간부 외출 제도 개선
	<p>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창업 교육·멘토링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2) 군 경력기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3)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
	<p>⑤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원격진료 확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2) 응급환자 후송역량 강화 3)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분야 발전 4) 숙련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 5) 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
	<p>⑥ 여가생활 여건 보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의 질 향상 2) 휴식과 편의성을 고려한 직영 군 휴양·편의시설 환경개선 3) 군인가족 복지지원 질적·양적 확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</p>	<p>① 올바르고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안보의식 고취 2)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	<p>②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내 가혹행위, 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 2)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
	<p>③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 2)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3) 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

< 대과제 >	< 중점 추진과제 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</p>	<p>① 장병의 복무 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 2)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 3)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
	<p>②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추진 2) 군인권보호관 관련 제도 보완요소 정비 3)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 4)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인권교육 기획·협력 5) 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개선 및 협업 강화
	<p>③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·군 협력관계 강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수사협의회를 운영을 통한 민·군 협력 강화 2)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3)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희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</p>	<p>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 2)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군 인사관리 발전 3)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
	<p>② 일·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2) 군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
	<p>③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추진 2)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 3) 양성평등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4)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
	<p>④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①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

- ① - ①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
- ① - ②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
- ① - ③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
- ① - 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
- ① - ⑤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
- ① - ⑥ 여가생활 여건 보장

1 - ①.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

□ 개요

- 병영생활의 필수인 의·식·주에 대한 청년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 및 피복·장구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
- 간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이고, 군인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현 실태

- 병력감소·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리병 부족 및 숙련도 저하에 대응하고,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 급식혁신 필요
- 첨단소재와 최신기술 활용,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·장구류 도입 필요
- 독립된 생활여건 보장, 주거 품질 제고 등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군 주거정책 추진 필요
 - * 국가인권위 :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을 10m²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('22.12월)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제도 개선
 - 민간 전문인력에 의한 급식 제공을 통한 병력 운영 제한사항 해소 및 장병 선택권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(뷔페식) 급식 확대
 - * 민간위탁 급식 '24년 26개 부대 → '25년 49개 부대로 확대
 -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빠르게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협업을 통한 간편식/조리법 개발 및 시범 적용
 - * '25년 대대급 3~4개 부대 시범 후 점진적 확대
 - 장병 선호메뉴 제공 확대를 위한 기본급식비 인상 (1일 13,000원 → 15,000원)
-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 품질 향상
 - 여러 피복을 겹쳐 착용하여 착용성·활동성이 저하되었던 기존 8종의 방한 피복·우의류를 경량성·활동성·보온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4종으로 통합·개선
 - * '25년 : 야전운동 적합성 평가, 구매요구서 확정, 조달 및 보급

- 사용자불만이 지속 발생했던 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해 장병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한 품목으로 소요군이 직접 선택하여 조달

* 면도기, 면도날(질레트, 슈크, 도루코), 운동화(K2, 블랙야크, 트랙스타, 아이더, 힐라)

Bulletproof Material Reliability Program

- 장병 생존성 강화를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(BMRP) 제도 도입

* 수명 도래시점이 1~2년 남은 방탄복, 방탄헬멧, 방탄판에 대해 전문기관(기품원)이 주기적으로 기술시험을 실시하여 방탄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, 방탄물자 품질 지속 보장

* '25년 : 사업설명회, 신뢰성평가 소요물자 종합, '26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

○ 국민 생활 수준에 맞춘 군 주거환경 개선

- 2~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 추진 (계속)

* '23년 개정된 「국방·군사시설기준」을 적용하여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(화장실·샤워실)을 포함한 2~4인실 (1인당 생활면적 10.78㎡, 4인실 기준)로 개선

- 1인1실 기준으로 간부숙소 부족물량 확보 (~'26년)

* 신축, 용도변경(노후관사→간부숙소), 매입, LH 임차 등

- 국민평형(32평형) 관사 보급 확대, 간부숙소 면적 및 비품 개선 ('23년~, 계속)

* 간부숙소 면적 확대(7평→9평), 간부숙소 비품 개선(인덕션, 전자레인지, 세탁기 실별 제공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민간위탁 급식 확대	• 민간위탁 급식 확대방안 수립(1월)	• 민간위탁 급식 확대(~12월)
② 간편식/조리법 적용	• 대대급 시범적용(3월~) • 시범적용 부대 만족도 조사(6월)	• 사단급 확대적용 방안 검토(9월)
③ 기본급식비 인상	• '26년도 기본급식비 증액 국방예산 편성(5월)	• 기재부 예산편성(8월) • 국회 예산심의(~12월)
④ 전투피복체계 개선	• 야전운용적합성 평가(~3월) • 업체 사업설명회(~3월) • 구매요구서 확정(~4월)	• 조달 및 계약(6~7월) • 전투피복체계 보급(10월~)
⑤ 장병 선호품 직접선택 조달 및 보급	• 소요군 직접선택 조달품목 심의(1월) * 대상품목 : 면도기, 운동화	• '26년 소요군 직접선택 조달품목 판단(9월)
⑥ 방탄물자 신뢰성평가(BMRP) 업무 도입	• '25년 추진계획 실무토의(1월) • 각군대상 사업설명회(3월)	• BMRP 전군 소요종합(7월) • '26년 BMRP 계획작성(9월) • '26년 BMRP 계획심의, 각군통보(10월)
⑦ 국민 생활 수준에 맞는 군 주거환경 개선	•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~4인실로 개선(계속) • 간부숙소 확보 • 군 주거지원 실태 조사 실시	•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~4인실로 개선(계속) • 간부숙소 확보(계속) • 군 주거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

① - ②.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

□ 개요
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,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보상체계 개선
- 군 사망자 유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초기부터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, 유족이 원하는 실용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

□ 현 실태

- 군 복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임무의 특성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
 - 병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'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205만원 (자산형성프로그램과 결합) 수준으로 지원
 - 간부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군 특수성과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 현실화 등 합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 필요
 - * 특히, 초급간부, 각군 핵심전투인력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 분야 처우개선 필요
- 군 사망자 발생 시 유족지원전담관 임명, 장례, 보훈행정 대행,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국민과 유족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노력 지속 필요
 - * '24년부터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해군에 편성된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타군도 함께 활용토록 조치 중

□ '25년 추진계획
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직업군인 수당 개선
 - 국정과제 108-1 (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) 최종 이행 완료
 - * '25년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인상: 봉급 150만원 + 자산형성프로그램 55만원

- 신분별, 직종별, 형평성, 특수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
 - * 수당간 비교를 통해 지급기준, 금액, 대상 재검토
 - * 전문인력(군의원, 사이버) 획득 및 핵심인력(조종사, 정비사) 유출방지를 위한 계급/신분별 적정 보수 판단(일반 사회 보수 수준 비교 등)

○ **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개선 추진**

- (심리치료) 사망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'심리치료비 지원사업'을 전군에 도입 (현재 해군만 운영 중)
 - *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, '26년 예산 편성 시 '심리치료비 지원사업'을 전군지원사업으로 반영 추진
- (장례비 인상) 복무 중 사망한 모든 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 반영 추진
 - * '16년 이후 550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장례비 지원금액을 '25년부터 700만원으로 확대 하였으며,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예정

입법계획 : 없음

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수당 처우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6년 수당조정요구 추진방향 보고 (3월) • '26년 수당조정요구 소요 종합 및 정책실무회의 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당조정요구안 관계부처 협의 * 인사혁신처, 기획재정부
② 유가족 지원방안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년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지침 수정 시달 (1월) • '26년도 유가족 지원 예산편성 요구 (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6년도 유가족 지원 예산편성 반영 (12월)

① - ③.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

□ 개 요

-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가·외출제도 개선과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장병 휴식권 보장 추진

□ 현 실태

-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 '월 2회' 이내 시행 중인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·시행 필요
-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(근속)휴가 신설, 국가공무원 대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외출 제도 개선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가·외출제도 지속 개선 필요
 - * 외출 시 국가공무원은 '1분 단위' 사용 가능, 하사 이상 군인은 '1시간 단위'만 사용 가능
- 휴가 사용여건 보장 등 장병 휴식권 개선 노력 지속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확대
 - '군인권개선협의회' 시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확대(안)* 토의 (3월)
 - * '24년 각 군 의견수렴 결과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 -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확대 시행 추진 (~12월)
 - *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장병 인식조사 (4월) 및 시범운영 (5월~9월)
 - *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' 의견수렴 (~10월) 및 시행 (12월)
- 간부 근속휴가 신설 및 간부 외출 제도 개선
 -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(근속)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(3월)

재직기간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 20년 미만	20년 이상
부여일수	3일 범위	5일 범위	7일 범위

 - * 하사 이상 군인의 해당되는 재직기간 중 각 1회 부여
 - 하사 이상 군인 외출(연가) 시 '1시간 단위'에서 '1분 단위' 사용으로 개선 (3월)

- 장병 휴식권 보장 현장점검 및 휴가사용 장려 문화 조성
 - 휴가 보장 현황 확인 등 장병 휴식권 보장 실태 현장점검 (반기 단위)
 - 휴가 시행 강조지침 하달 지속 (분기 단위)

□ 입법계획

-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 : ~ '25. 3월
 - * 간부 근속휴가 신설 및 외출제도 개선 등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확대' 안건토의 (3월) • '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장병 인식조사 (4월) • '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확대 시범운영 (5월~9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확대' 의건수렴 (~10월) • '병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확대' 시행 (12월)
② 간부 근속휴가 신설 및 외출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(1월) •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(3월) 	
③ 휴가사용 장려 문화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가 시행 강조지침 하달 (1월, 4월) • 휴가 여건 등 장병 휴식권 보장 관련 현장 실태 확인 (2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가 시행 강조지침 하달 (7월, 10월) • 휴가 여건 등 장병 휴식권 보장 관련 현장 실태 확인 (9~11월)

1-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

□ 개요

-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및 자기개발 활동 지원으로 군 복무기간을 학업·경력의 단절이 아닌 생산적 활동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 제고

□ 현 상태

-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창업역량 강화 필요
 - *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창업경진대회와 연계 필요
- 전역예정장병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
 - * 장병들의 취업 선호기업 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 필요
- 군 복무가 '학업·경력의 단절'이라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복무 주기별 맞춤형 자기개발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창업 교육·멘토링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
 - (교육/ 멘토링) 아이디어 개발·육성 및 전역 후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및 집중 지원
 - * 창업인식교육 : ('24년) 300회, 2H → ('25년) 기본 400회, 2H
 - * 창업멘토링 : ('24년) 창업희망 700팀, 국방경진대회 진출자 100팀
→ ('25년) 창업 관심 600팀, 국방경진대회 진출자 100팀 집중지원
 - (창업경진대회) 정책 홍보 및 범부처 대회 진출팀 확대로 창업문화 및 붐조성
 - * 범부처 경진대회 출전팀 확대 : ('24년) 25팀 → ('25년) 26팀
- 군 경력기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
 - 「국방 일자리 발굴 추진단」 운영을 통한 공공분야 및 민간 우수기업 등 일자리 확대

- 보훈부가 추진 중인 '군 복무경력 인정 범제화' 관련 적극 협업
 - * 국가 및 공공기관 호봉(임금) 산정시 군 복무경력 반영 의무화 등
- NCS* 직무능력을 반영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체계 구축
 - * NCS 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: 국가직무능력표준

○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

- 軍 복무 중 학점 취득 기반확대를 위한 '대학 학점 인정제' 참여대학 확대
 - * 원격강좌 학점취득 인정 : ('24년) 184개 → ('25년) 187개
 - *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: ('24년) 88개 → ('25년) 94개
- 군내 자격검정(국가기술·국방 분야) 취득 여건 보장
 - * (확대) 응시료·실습 집체교육 지원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원 확대 (1.2만명→1.4만명)
 - * (신설) 새로운 산업 수요 및 장병 관심 고려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
(2개 종목 : 국방드론 정비사, 방호기술관리사)
- 다양한 자기개발 학습 여건 보장
 - * (e-러닝)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어학·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
 - * (병 자기개발 비용지원) 어학 공부, 자격취득 응시료, 학습 교재비 등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 (자기부담률 20%)

□ **입법계획**

- 「군인사법」 개정 (~ '25. 12월) : '창업'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창업경진대회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창업경진대회 공고 (2월) • 각군리그 진행 (2월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창업경진대회 시상식 (9월) •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(9월~12월)
② 일자리 확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일자리발굴단 추진 (2월~12월) • 취업박람회 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CS, 내일배움카드 등 관련 고용부 협업 (~12월)
③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관기관(교육부) 협업 추진 (2월) • 1학기 대학 원격강좌 수강 지원 (2~5월) • 25년 제1회 국가기술자격검정 (3~6월) •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성과분석 (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학기 대학 원격강좌 수강 지원 (8~10월) • 25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검정 (8~12월) • 대학 대상 학점인정제 참여 정책설명 (~12월) •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성과분석 (12월)

① - ⑤.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

□ 개요

-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료·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으로 진료여건 개선하고,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군 의료서비스 제공

□ 현 실태

- 군부대는 전방 및 해·강안 등 격오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,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신속한 응급후송역량 확보 필요
- 군은 외상환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필요, 트라우마 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진료 수요 증가
- 현재 군 의료는 단기군의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군 의료 전문성 향상 및 임상경험 축적 제한(전체 군의원 중 장기군 의원은 7% 수준)
- 감염병 위기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고, 데이터에 기반한 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
 - * '24년 역학조사관 요원 106명 양성, 군 감염병 관리정보시스템 사업 TF 편성('24.6월), 본사업 계약('24.12월)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
 -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체계 추가 소요 검토('25.4월)
 - 원격진료체계 확대 도입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장비 설치(~'25.12월)
- 응급환자 후송역량 강화
 -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전력화(4대) 사업추진(계속, ~'28년)
 - * 전력화 장비 양산계약('25.7월), 양산 실시('25.7월~)
 -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(계속, ~'25.4월)
 - * HW/SW 통합테스트('25.2월), 운용시험평가('25.3월), 검수/검사 및 전력화('25.4월)

- **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분야 발전**
 - 국군외상센터의 민간인 외상환자 진료 시행 (계속)
 - * 국군외상센터 환자 현황 : ('23년) 232명 → ('24년) 502명
 - 군 정신건강분야 발전을 위한 '군 정신건강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' 수립
- **숙련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**
 - 장기군외과 확보 및 양성 방안 검토
 - 군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유인방안 마련
 - * 진료업무보조비 인상 등 추진
- **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**
 - 통합감염병 감시 지원체계로서, '군 감염병 관리정보시스템' 개발 추진
 - * '25년 사업 예산 68.12억 반영 및 '26년 예산편성 추진 (총사업비 108.33억)
 - 군 역학조사관 및 두창백신 접종전문가 양성 교육
 - * '25년 역학조사관 양성교육 과정 및 두창백신 접종전문가 30명 양성
 - 생물테러 위기 대비, 전투력 보존을 위한 예방·치료 능력을 구축을 위한 3세대 두창백신 평시접종 추진 ('25년 3세대 두창백신 평시접종, 7월 예정)

□ 입법계획

-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
 - * 전군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 근거 및 질병관리청 체계 데이터 연동 내용 반영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원격진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격진료 추가소요 검토 (1~4월) • 원격진료 추가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 건의 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격진료 장비 계약체결 및 장비설치 (6~12월)
②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전력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을 위한 '26년도 예산 반영 (~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력화 양산계약 및 양산실시 (7~12월)
③ 통합관제시스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테스트 및 운용시험평가 (1~3월) • 전력화 완료 (4월) 	
④ 정신건강분야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·관·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정신건강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 (7~12월)
⑤ 숙련 의료인력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(~3월) 	
⑥ 군 감염병 감시·검사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6년 전군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편성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군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사업 중간보고회
⑦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역학조사관 양성·보수교육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세대 두창백신 평시접종 실시

① - ⑥. 여가생활 여건 보장

□ 개요

-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병영 내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
- 장병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책읽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공연 지원,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교육 제공으로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

□ 현 실태

-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, 청년층 전자책·오디오북 이용 증가에 따른 진중문고 전자책·오디오북 활용 필요성 증대
- 학습, 휴식,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병영도서관의 장서를 확대하고 공간 개선을 위한 환경 정비 필요
- 최전방 부대, 도서지역 등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장병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지원, 체험교육 기회 제공 필요
- 노후화로 이용여건이 열악한 직영 군 휴양시설 및 군 마트의 환경 개선과 장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의 질 향상
 - 장병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책읽는 병영문화 조성
 - * 진중문고 전자책·오디오북 서비스 대상 및 규모 확대 (서비스 대상 간부로 확대, 전자책·오디오북 20종 이상 보급 목표)
 - * 장병 수요를 반영해 정기간행물 국방허브 열람서비스 확대 ('25년 11종 e-book 제공)
 - * 병영도서관 장서 확대, 노후 병영도서관의 서가대 보충, 물품 교체 등 환경개선

- ‘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’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
 - * 장애인 문화예술 ‘M공감’,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등 추진, 격오지·도서지역 등 우선 지원
 - * '25년 예산 증액 (15.2억 → 18.1억)으로 장애인 선호도가 높은 고품격 문화공연 제공
- 수요자 맞춤형 온·오프라인 문화예술 체험교육 제공
 - * 원하는 시간·장소에서 수강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형 강의콘텐츠 제공 (1.2만명 대상, '25년 예산 8.6억 원)
 - * 음악, 미술, 사진 등 장애인 선호 분야를 선정, 부대 방문형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 ('25년 예산 10.7억 원)

○ 휴식과 편의성을 고려한 직영 군 휴양·편의시설 환경개선

- 군 휴양시설 (송정콘도, 그린나래호텔) 리모델링 착수
 - * 송정콘도 : '24~'25년 (71억원) / 그린나래호텔 : '24~'26년 (213억원)
- 군 마트 (14개소) 및 부대복지회관 (20개소) 환경개선 시행
 - * 군 마트 (80억원) : 마트 신축 및 복합편의시설 (마트+카페)로 개선
 - * 부대복지회관 (31억원) : 주기적 보수로 쾌적한 환경 유지
- '25년 풋살경기장 (31개소, 68억원) 신축 및 체력단련기구 (129개소, 35억원) 보급 예산 증액 편성

○ 군인가족 복지지원 질적·양적 확대

- 군 관사지역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 확대
 - * '24년 기준 65개소(누적) 설치·운영 중이며 '25년에 3개소 추가 설치
- 군 가족 힐링프로그램 지원 : 162가족('24년) → 180가족('25년)
- 문화, 여행 등 분야별 민간 제휴서비스 확대
 - * '24년 하나투어, 스타벅스, 언더아머 등 민간업체 제휴확대, '25년 신규 제휴 업체 확대 추진
- 거주여건향상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방식 개선
 - * 노후 및 입사율 저조한 지방 기숙사 폐쇄, 행복 기숙사로 대체 운영 검토
 - * 수요가 많은 수도권 기숙사 신·증축 추진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독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추가 8종 서비스 (4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구입계약 (6월) · 병영도서관 지원 예산 재배정(각군)(2월) ·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, 환경개선 (각군, 5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구입계약 (10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이용률만족도 조사 (12월) ·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 및 환경개선 점검 (9월, 12월)
②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계획 수립 (1월) ·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예술단체-부대 매칭 (~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 (~12월)
③ 온·오프라인 문화예술 체험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대 방문형 문화예술체험교육 소요 종합 및 예산 재배정 (~3월) · 온라인 문화예술 체험교육 업체 계약 (~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병영 문화예술 체험교육 및 소개교육 (~12월) · 온라인 문화예술 강의콘텐츠 제공 (~12월)
④ 군 휴양·편의시설 확대 및 운영 다양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콘도·호텔 리모델링 · 직영 휴양시설 다양한 방식 계획 구체화 (복합복지공간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콘도·호텔 리모델링 · 직영 휴양시설 다양한 방식 계획 중기계획 반영 (복합복지공간 등)
⑤ 군마트 및 편의시설 신축 등 복지인프라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 마트, 풋살경기장 신축 · 군 마트 환경개선 (리모델링, 보수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 마트, 풋살경기장 신축 · 군 마트 환경개선 (리모델링, 보수 등)
⑥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방식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 기숙사 폐쇄검토 · 행복기숙사 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 기숙사 폐쇄검토 · 행복기숙사 협조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②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

- ② - ① 올바르게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
- ② - ②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
- ② - ③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

2 - ①. 올바르게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

□ 개요

-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, 국가관, 군인정신 등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'군인다운 군인'을 육성

□ 현 상태

- 국정과제에 '장병 정신전력 강화'를 포함하여 적극 추진 중
 - * 국정과제 107-5.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
- 엄중한 안보상황 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대적관 확립 필요
- 軍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위한 군인정신 교육 요구

□ '25년 추진계획

○ 장병 안보의식 고취

- 국방부,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지원 (5~12월)
 - * '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' 주제로 자긍심 고취 교육 실시(약 2,100회)
 - * 대대급 병 → 사단급 간부로 교육대상 확대
 - * 융합식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교육효과 고려, 비중 확대 (65% → 70%)
- 대적관 교육 지속, 군 자긍심 고취 위한 국가관·군인정신 교육 확대 (연중)
 - * 완전작전 수행,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사례 등 발굴·교육
- 국방정신전력원, '찾아가는 정신전력교육 아카데미' 지원 (연중)
 - * 院의 우수한 교수진이 격오지 부대, 학교기관 등 방문하여 교육 지원(약 200회)

○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
- 안보상황, 야전요구를 반영한 정신전력교육 자료 제작 지원 (연중)
 - * 중요 안보현안에 대한 지휘관 참고자료 제작·활용 (월 1회), 주요 안보계기일 (6·25전쟁 70주년, 광복 80주년 등) 관련 수시교육자료 제공, 정신전력 콘텐츠 만족도 제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장병 모니터 제도(의견 접수, 우수자 대상 개인 포상 수여) 운영
- 신기술 적용 교육 사업 방향 추진 (~12월)
 - * 야전부대 VR 정신전력교육센터 → 신병 대상(육군훈련소) 집단체험형 파노라마관(가칭) 시범사업 전환, 육군훈련소 파노라마관 시범 운영(4월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안보의식 고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(5월~) - 제안서평가, 교육업체 계약 (4월) - 전군 초빙교육 지원 (~12월) · '찾아가는 정신전력교육 아카데미' (~12월) - 격오지, 학교기관 방문 교육 · 군 자긍심 고취교육 (~12월) - 군복 입은 만주시민 특별정신전력교육 (4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군 정훈장교 워크숍 (10월) ·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(11월) · 장병 모니터 우수자 포상 (12월)
②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보상황, 아전요구를 반영한 정신전력교육 자료 제작 지원 (연중) - 지휘관 정신전력교육자료 제공 (월1회) - 6·25 전쟁 70주년 계기교육 (6월) · 신기술 적용사업 전환 - 육군훈련소 파노라마관 시범운영 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복 80주년 계기교육 (8월)

② - ②.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

□ 개요

-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등을 근절하기 위한 '성폭력 및 가혹행위 등 예방정책 행동화' 추진 및 부대 실태점검을 통한 병영 내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개선

□ 현 실태

- 군 내 가혹행위 및 성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지속하여 발생
- 병영 저변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및 실태점검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군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
 - 각 군 지휘관 및 주임원사 보직전 소집교육 시 「군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」 필수과목에 반영하여 교육 시행
 - 행동수칙 강의 동영상 및 쇼츠 등을 활용한 전 장병 교육 시행
 - 전·후반기 현장방문 시 장병들의 행동수칙 숙지 수준 점검
-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
 - 군인권개선추진단 내 통합점검팀 (인권, 성희롱·성폭력, 병영문화, 양성평등)구성, 사·여단급 부대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 등 실태 파악
 - 군기사고 다수 발생 등 취약부대 위주 선정, 지휘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'병영문화혁신 통합 솔루션' 제공

입법계획 : 없음

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	· 행동수칙 강의동영상 및 쇼츠 활용 교육 · 핵심 행동수칙 숙지 수준 점검	· 대대장·주임원사 보직 전 행동수칙 교육 · 핵심 행동수칙 숙지 수준 점검
② 병영문화 혁신 현장점검	· 병영문화혁신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현장방문 (2~6월)	· 병영문화혁신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현장방문 (8~12월)

② - ③.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

□ 개요

- 군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, 군기강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징계제도 개선 추진
-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

□ 현 실태

- 군기강 확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불법도박, 성범죄, 폭행 등 주요 사건·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신뢰도 저하 야기
 - * 군기강 협의체 활성화, 제대별 현장진단 시스템 보완, 기능별/제대별 지휘관 조연 활성화 등 추동력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
- 군기교육 등 병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* 필요
 - *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추동력 있는 정책발전 추진

□ '25년 추진계획

-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
 - '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' 하달 (1월)
 - * 연간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별 자체계획 수립, 주기적 강조기간 운영 (분기별 1주이내)
 - 군기강 확립 협의체 활성화*를 통한 주요 현안토의 및 대책 추진 (지속)
 - * 분기단위 정기협의체, 월단위 실무계통 수시협의체 시행
 - 제대별 현장진단 시스템 내실화*를 통한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 (반기)
 - * 사전 부대진단을 통한 진단결과 제공 등 통합솔루션 개념 적용下 병영문화혁신 현장방문 추진
 - 기능별 / 제대별 지휘관 조연 활성화*를 통한 지휘여건 보장 (지속)
 - * 군사경찰, 감찰, 법무 등 기능별 지휘관 조연 자료 제공 정례화 등

○ **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**

- 군기교육 등 병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(감봉 확대 등) 추진 (~12월 限)
- 허위·음해성 신고 예방을 위한 징계양정기준 개선 (~6월)
 - * 병 복종의무위반 별목에 음해·무고·허위 신고 등 구체화 검토
- 병 감봉처분 위하력 확보를 위한 감액비율 상향 검토
 - * 병 감봉 감액비율을 1/3로 상향하는 등의 「군인사법」 개정안 마련 검토

○ **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**

- 군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·해소 (2~6월)
-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행동화 확인·점검 (5월, 10월)
- 국방안전 분야 협력 및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‘국방안전 심포지엄’ 개최 (11월)
 - * 민·관·군 협력 하 국방 안전분야 발전과 소통, 상호 협력체계 구축

□ **입법계획**

○ 「군인사법」 개정 : ~ '25. 12월

* 개선방안 확정 시 개정 추진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 시달(1월) • 1, 2분기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강조기간 운영(3, 6월) • 군기강 확립 정기협의체(2, 5월) • 군기강 확립 수시협의체(1~6월) • 사고예방 교육자료 제공(수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, 4분기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강조기간 운영(8, 12월) • 군기강 확립 정기협의체(8, 11월) • 군기강 확립 수시협의체(7~12월) • 사고예방 교육자료 제공(수시)
② 군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기교육 등 병 징계 실효성 강화 연구결과 유관기관 및 각 군 의견수렴(2~6월) • 「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」 개정(~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선방안 확정 시 군인사법 개정 추진(7~12월) • 「군인사법」 개정안 마련 검토(~12월)
③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중안전점검(2~6월) •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 점검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 점검(10월) • 국방안전 심포지움 개최(11월)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③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

③ - ① 장병의 복무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

③ - ②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

③ - ③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·군 협력관계 강화

3 - ①. 장병의 복무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

□ 개 요

- 장병들의 복무 적응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군 심리검사의 식별기능을 강화하고, 간부 대상 민간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·활용도 제고 및 사업확대 기반 마련
- 증원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 상담역량을 제고하여 장병의 상담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

□ 현 실태

- 대내외 상담제도 활용, 주기적 심리검사 등을 실시 중이나, 자살 등 사건·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
-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복무간 직·간접적 경험으로 발생하는 장병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사건별, 분야별로 해소할 수 있는 상담관 역량 필요성 대두
 - * 각종 사고 목격 또는 재해 현장 투입 등 트라우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개입·해소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
 - '25년 사업 조기 시행 ('24. 12. 26. ~)으로 지속적인 상담여건 보장
 - * '24년에는 용역계약 등으로 인해 상담지원이 다소 늦게 시작(3. 18.~)되어 상담공백 발생
 -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
 - * 간부후보생 대상 상담 인식개선 교육(연중), 홍보물 배포(2월) 및 이벤트(분기)
 -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강조 하달(2월)

-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
 - '25년 증원 (+40명) 인원을 각 군, 국직부대에 배정 및 채용
 - *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 심의 ('25. 3월), 채용 (4월~), 배치 (7월)
 - 전문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설 (2분기~)
 - *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업, '심리적 응급처치 교육' 권역별 실시

○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

- 병 관계유형검사 개선연구 ('24년)에 따라 심리검사 결과표 개선 및 시스템 적용
 - * 도박, 마약 등 중독성 관련 신규척도 문항 42개 추가 (1분기)
- 간부 심리검사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추진 (~11월)
 - * 간부 심리검사체계의 사전 식별기능 강화를 위한 △ 동료보고식 간부 심리검사 도입, △ 사관생도 및 후보생 대상 군 심리검사체계 확대에 대한 연구
- 간부 심리검사 모바일체계 구축 추진 (~11월)
 - *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진행 중

입법계획 : 없음

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(3월, 5월) •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강조 하달 (2월) • 간부후보생 대상 교육 (상반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(8월, 10월) • 간부후보생 대상 교육 (하반기)
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 (3월) •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(4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채용자 각 군 등에 배치 (7월) •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(~11월)
③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리검사 시행지침 시달 (2월) • 병 관계유형검사 개선 시행 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부 심리검사체계 발전방안 연구 (11월) • 간부 심리검사 모바일체계 구축 (11월 시범운영, '26년 1월 전력화)

③ - ②.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

□ 개요
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에 대한 법제화 및 군인권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군 지원방안을 구축

□ 현 실태

- 현재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,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절차는 「군 인권업무훈령」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, 법적 근거 부재
 - * 국방부 및 각군 인권상담 및 진정 건수(군인권지킴이 기준) : ('22년) 2,489건 / ('23년) 1,381건 / ('24년) 1,814건
-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권위와의 이견을 조정*하려 했으나, 인권위의 부동의로 결렬('23. 12월)되었으며,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폐기

*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('23. 11월, 법제처 주관)

<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 주요내용 >

-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군 외부 구제절차(국가인권위 등) 이용 가능 명시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이용 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규정

-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('22. 7월~)에 따라 군 사망사건 통보, 조사·수사 입회 지원,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 지속 협력

□ '25년 추진계획

- 군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추진
 - 실무협의회, 토론회 등을 통해 법률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인권위와의 이견을 해소하여 입법절차 지속 추진
 - *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안(김병주의원 발의, '24. 7. 10.)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

- **군인권보호관 관련 제도 보완요소 정비**
 - 군 사망사건 현장 입회 및 진정사건 조사 과정 등 제도적 보완요소 식별
- **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**
 - 훈련병 및 장병 대상 제도 소개 및 생활관에 안내자료 (포스터 등) 비치
- **국방부-인권위 공동 인권교육 기획·협력**
 - 군인권교관 과정, 지휘관 인권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기획·운영
 - * 지휘관 인권교육 과정은 교육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
 - 격오지 부대에 대한 전문적 인권교육을 위해 민간 전문강사 지원
- **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개선 및 협업 강화 (반기)**
 - 국방부-국가인권위원회 공동 협의회,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군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인권교육 개선사항 도출

□ 입법계획

-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
 - * 군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 법제화	· 인권위와 법률 개정안 협의(계속)	· 「군인복무기본법」 개정 추진 · 시행령 개정 반영(법률 개정 완료시)
② 군인권보호관 제도 협업	· 군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협조/지원 · 군인권교육협의회(상반기, 6월)	· 군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협조/지원 · 군인권교육협의회(하반기, 12월)

③-③.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군 협력관계 강화

□ 개요

- 일부 범죄의 재판권 민간 이관 등 군 사법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·군 협력 관계 강화 필요
- 민·군이 연계된 체계적 사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
-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강화 등을 위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여부 검토 및 이를 위한 민·군 합동연구 실시 방안 검토

□ 현 실태

- 군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·군 협력 필요성 지속 증가
 - * 2중 수사·재판 예방, 수사 관련 통보 등 상호 협력 필요
- 국방부 및 각 군은 소규모 시스템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건 관리가 제한되고, 민간과의 협력에도 한계
 - *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를 사용하는 민간 사법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 제한
-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민간법원으로 재판권 이관,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법원 설치 및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(22.7월부 시행)
 - *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기존 군 사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일부 보완·개선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수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·군 협력 강화
 - 재판권 오류, 통보 누락, 징계업무 제한을 해소하고, 민간 사법기관의 군 사건 처리 개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 추진 (9월)
 - * 국방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군·민간 사법기관

○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

↳ 군 형사사법 정보 관리, 군·민 사법기관간 군 형사사건에 대한 데이터, 전자문서 저장·유통 등

- 분석·설계 (~'24. 9.) / 시스템 테스트 (~'25. 7.) / 시험평가 (~'25. 10.) / 인도 (~'26. 1.)
* 총 사업비(223.65억) : '22년 (4.6억), '23년 (34.5억), '24년 (157.52억), '25년 (27.03억)
-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동가능하도록 민간 사법기관과 협조 (지속)
- 체계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자 교육

○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

-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경과에 따른 제도 발전 의견조회*

* 국방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군·민간 사법기관 및 군사법원 출입 변호사 등

입법계획 : 없음

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수사협의회 정례화	• 상호 협력사항 안건 발굴 및 검토 (~6월)	• 수사협의회 개최 (9월)
②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	•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(~7월)	• 시험평가 (~10월) • 전력화/안정화 (~12월)
③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경과에 따른 제도 발전 의견조회	• 군 수사기관 협의회 • 군 사법기관장 등 간담회 개최 • 군사법원 출입 변호사 간담회	•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• 민·군 수사기관 협의회 •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간담회 • 군 사법기관장 등 간담회 개최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4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

- 4 - 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
- 4 - ② 일·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
- 4 - ③ 현장 중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
- 4 - ④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

4 - ①.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

□ 개요

- 정책기반 체계를 강화하고, 민·관·군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군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동력 확보
- 조직내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근무여건 지속 개선

□ 현 실태

- 국방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군 내 여성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 발전 필요
 - *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부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치중 되지 않는 노력 필요
- 군 간부 처우·복무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임간부 충원 제한, 병역자원 감소 등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 어려움
- 여군 확대에 따른 '복무여건 개선' 추진 관련, 훈련 시 화장실 여건 미흡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군 야외 훈련장 시설 개선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
 - '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'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협력·조정 (연중)
 - * 양성평등위원회 (정기 연 2회 / 수시), 분과별 소위원회 (필요시), 정책자문 및 교육자료 감수 (수시)
 - 주요 법령, 정책, 사업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(계속)
 - *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여가부 주관 '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' 프로그램 참여 적극 권장
 - 국방 성인지 통계집 발간 (~12월)
 - * 각종 인사 및 복지제도 관련 남녀의 상태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·설명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시 근거 자료로 활용
 - * 분야 : 성평등 기반, 인사관리, 일·가정 양립, 양성평등 교육 등

○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군 인사관리 발전

- '23~'27 여군 인력확대 계획에 의거 주기적 성과분석 및 보완대책 강구 (계속)
 - *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회의 (반기), 여군 인사운영 성과분석 (반기)
- 군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의 지속 개선으로 '25년 여군 인력확대 목표 13.1% 달성 추진 (연중)
 - * '25년 여군 신분별 확대목표 : 장교 14.4%, 부사관 12.5%
- 관리자급 및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(연중)
 - * '25년 : 고위공무원단 17.4%, 본부 과장급 39.6%,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: 40%

○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

- 근무자가 상주하는 시설에 여성화장실 확보 추진 (계속)
 - * '23~'24년 확보 및 추가 소요 점검 (~2월), '26년 예산편성 및 '27~'31 중기계획상 소요 반영
-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불합리한 여군 복제규정 개정 추진 (~12월)
 - * 정복 상의 및 근무복 가슴 주머니 부착, 정복 및 동근무복 넥타이 개선 (리본→일반)
- 열악한 군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위한 단계적 확보 추진 (육군, 해병대)
 - * '26년 시범사업 예산편성 및 '27~'31 중기계획상 소요 반영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수립 •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(9월) • 국방 성인지 통계집 발간 (12월) • '26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수립
② 여성 대표성 강화, 여군 인사관리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(소위원회, 정책 자문 및 교안 감수 등) •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 관리 및 점검 ('25년 사업과제 선정, 상반기) • 법령,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(계속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회의 (7월) • 여군 인사운영 성과분석 (12월)
③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회의 (2월) • 여군 인사운영 성과분석 (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야외 훈련장 개선 소요조사 (~2월) • 군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추진 (~12월) • 군인복제령 개정 (12월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화장실 확보 추진 (계속) 	

4 - ②. 일 -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

□ 개요

- 일 - 가정 균형 실현을 위한 근무여건 마련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군 차원의 실질적 대응 강화 추진
-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제고 추진

□ 현 실태

-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더하여 군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중
- 저출산 위기극복 및 자녀돌봄 여건 확대 등을 위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지속 개선 필요
-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군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비품 교체 요구 증대

□ '25년 추진계획

- 군 특성을 고려한 일 -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
 - 출산·양육 관련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일 - 가정 양립지원 제도 개선* 지속 추진 및 군 내 출산·양육 지원방안** 마련
 - *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(10일→20일),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(90일→100일), 육아휴직 전 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등
 - ** 군 출산현황 분석 등을 통한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
 - 일-가정 균형 실현을 위한 군 내 유연근무제* 도입 방안** 마련
 - * 국가공무원은 탄력근무제,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나, 군은 육아 목적의 탄력근무(시차출퇴근제)만 적용 중
 - **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성 분석 및 군 임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방안 마련

○ **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**

- 노후화된 군 어린이집 (10년 이상 경과) 환경개선* 및 비품 (10년 이상 사용) 교체 예산 반영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

* '25년 : 4개소 환경개선 추진

- 군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

* 시설 운영 실태 확인, 교직원 및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

□ **입법계획**

-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」 개정 추진

* 배우자 출산휴가,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등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사항 반영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(시행령 및 훈령 개정 병행) • 군 출산·양육 지원방안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출산·양육 지원방안 핵심과제별 추진사항 분기별 점검
② 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과제 수행 •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관련 야전 의견수렴 (병영문화혁신 현장 지도방문 병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후화 군 어린이집 환경개선(4개소) • 노후 비품 교체 관련 예산 반영 •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

4-③. 현장 중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

□ 개요

-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·대응 정책 추진 및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
- 교육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을 다양화하고,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

□ 현 실태

- 국방부 및 각 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정착
 - * 법규 정비, 제도개선 및 정책 지속 보완,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
-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사건 경향 및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방 교육의 실효성 향상 필요

□ '25년 추진계획

-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추진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법규 정비* 및 자문기구 운영**
 - *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등 관련 법규 개정, (필요시) 「부대관리훈령」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 개정 추진
 - **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(반기 단위) 개최
 - 지휘관 주도의 예방활동 생활화
 - * 지휘관 수시 예방의지 강조로 경각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
 - 야전부대 컨설팅팀 운영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
 - * 분기 단위 부대별 소요 파악 후 상담·예방 교육, 이행실태 점검 등 패키지화 지원
 -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 (연 2회, 하절기 및 연말연시)
 - *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, 법규교육, 성희롱·성폭력 예방활동 이행실태 확인 등 현장 지휘관 주관 예방활동 강화

○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

- 사건처리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
 - *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임무 수행, 피해자 신상 및 사건 관련 비밀보장 엄수, 행위자·피해자 분리 및 신속·엄정한 사건처리
-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휘조언 임무 역할 정착
 - * '신고된 사건' 보고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석, 사건 관련 '지휘조치 사항 조언 임무' 수행
 - * 지휘조언 : 피해자 요구사항, 2차 피해 방지 활동, 기타 피해자 지원 사항, 피해자 심리상태 등
 - * 성고충전문상담관 가이드 북(2월 발간) 및 「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」(3월 개정) 반영
- 피해자 보호지원·사건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 방지 추진
 - * 대외위탁교육 추진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,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대상
 - * 실무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방지 워크숍 추진 : 군인권개선추진단 주관
 - * 대상 : 성고충전문상담관, 각 군 피해자지원팀 및 사단급 이상 양평담당(군무행정)
- 국방 1365 상담·신고앱 이용 활성화(연중)
- 민간 피해자지원 전문기관 협조 강화
 - * 외부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군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연계 지원(계속)
 - * 해바라기 센터, 성폭력상담소, 스마일센터(범죄피해자 지원센터)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

○ 양성평등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

- 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체(국직포함 장성급 부대) 및 관련 예산 지원(연중)
 - * 각 실시부대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제안은 시행, 필요시 각 군 본부에 건의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콘텐츠(동영상, 포스터, 웹툰) 공모전 추진(4~9월)
 - * 우수작은 장병대상 성인지 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
-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안내·홍보

○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

-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효과적인 성인지교육 실시(연중)
 - * 간부 대상 토의식 교육 확대(체화교육 강화), 계급별 특성을 반영한 집중 교육(핵심주제 위주)
- 군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의인력 전문성 강화
 - * 군 전담교관 양성 민간 전문기관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) 위탁교육 실시(연중, 10개 기수 550명)
 - * 군 전담교관용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정안 제작·배포(12월)
 - * 전문강사 대상 군 특성을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(4월)
 - * 우수교관/강사 경연대회를 통한 강의능력 증진 및 우수강의안 공유(하반기)
 - * 전문강사/전담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(하반기)
- 청년 장병의 특성을 반영한 몰입도 높은 교육자료 개발(연중)
 - * 웹드라마, 웹툰, 숏폼 등 MZ세대 미디어 소비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

□ 입법계획

○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3조(신고의무 등) 등 개정 추진

* 성폭력 신고 범위에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인 양성평등계선 추가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법규 개정/자문기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반기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군인복무기본법」 개정 추진(계속) 하반기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부대관리훈령 개정 추진 * 각 군 개정안 의견수렴안 검토
②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반기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시행 하절기 특별 강조기간 계획 작성(6월) 국방 1365 상담·신고 앱 홍보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반기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시행 하절기 특별 강조기간(7~8월) 연말연시 특별 강조기간(12월~26.1월)
③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전 추진(4월~6월) 우수작 선정(6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수작 발표/시상(9월) 우수 콘텐츠 교육자료로 재구성 제작/배포
④ 피해자 보호지원·사건처리관계관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(연 12회, 5월~) 군 피해자지원팀 및 사담급 이상 양평담당(군무행정)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(연 12회, ~11월) 성고충전문상담관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강화 워크숍(11월)
⑤ 성인지교육 강화, 콘텐츠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강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수교관 및 강사 경연대회(하반기) 전문강사/전담교관 역량강화 크숍(하반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 군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(연중)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군 전담교관 양성 교육(10개 기수, 550명)
⑥ 조직문화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반기 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반기 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체

4 - ④.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

□ 개요

-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 검토

□ 현 실태

- 군인·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을 군인·군무원으로만 구성
 - * 징계절차 착수 이전에 개최되는 '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'의 위원 6명 중 2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, 현행 제도하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성폭력 예방·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가능

□ '25년 추진계획

-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
 -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 있는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
 - *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민간 징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군인사법」,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이 발의(송옥주 의원)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

□ 입법계획

- 「군인사법」 및 「군무원인사법」 의원발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 참여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5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	· 「군인사법」,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 참여	· 「군인사법」,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 참여